

## 경제성장의 원동력 모색\*

이 지 순\*\*

### 논문초록

이 글은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사적 소유,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경쟁에서 나옴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사적 소유가 소용이 없으며,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할 유인이 저하되고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경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적 소유와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 자유, 경쟁의 세 힘 중 사적 소유가 가장 원천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후반부는 영속 세대 모형을 활용해서, 다른 모든 면은 그대로 둔 채, 소유 형태만 공유에서 사유로 전환하면 정상상태의 1인당소득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필자가 행한 수치 계산 예에서는 공유에서 사유로 전환하면 1인당소득이 76% 증가한다. 이는 사적 소유의 투자유발효과 때문인데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갖는 노력유발효과까지 더하면 소득은 76%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경제가 정상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하려면 인적자본, 지식자본, 기술자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성장의 엔진인 인적자본, 지식자본 및 기술 자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 즉, 사유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경제성장의 원동력, 사적 소유, 자유, 경쟁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0, O1

투고 일자: 2016. 2. 2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3. 8. 게재 확정 일자: 2016. 3. 15.

\* 이 글은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 학회장 기초연설의 내용을 글로 구성한 것이다. 학부수준의 경제학도들의 이해를 돕고자 누구나 아는 바를 쉬운 문장으로 설명한 글로서 본 학술지에 정규적으로 실리는 학술논문과는 질적 수준이 다른 글임을 밝혀둔다. 핵심을 잘 짚어주신 익명의 논평가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mail: jisoon@snu.ac.kr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동인은 무엇일까? 즉, 어떤 힘들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의 결과 우리는 위 물음에 대한 답을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할까?

### I. 경제성장에 비결이 있는가?

경제성장의 비결에 관하여 그 동안 제시되어온 가설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누구나 다 열성을 다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한다. 경제주체들이 협력해서 창출한 소득은, 그들의 동의하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금으로 내는 것 이외에는,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배분된다. 경제주체들은 그들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와 투자에 나누어 쓰게 되는데 이때 소득 중 더 큰 몫을 자신과 후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할수록 잘 살게 된다. 즉,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때 투자는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의 대상에는 기계나 공장시설 같은 물적 자본은 물론 건강 교육 훈련과 같은 인적 자본이 포함된다. 연구개발 투자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며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일 역시 중요한 투자가 된다.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규범, 제도, 기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일 역시 투자에 해당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대종은 가계나 기업 등 사적 경제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투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유무형의 사회자본 투자에 소홀하거나 잘못하면 경제가 원만하게 성장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도 가르칠 선생님이나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경제주체들이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 연구개발 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 개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금과

1) 이 부분은 Weil(2013), Jones and Volrath(2013), Lucas(2002), Solow(2001) 등의 설명을 반영한 것이다.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업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가는 자기 또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원자재, 부품, 기계장비 등의 물적 생산요소를 조달하고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 등 인적 생산요소를 고용한 다음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가는 원자재와 부품과 장비와 시설물 공급업체의 구매자가 되어 관련 업체의 성장발전을 견인하며, 종업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주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러한 일 즉, 기업경영에 성공한 기업이나 기업가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신공장, 신기술, 신상품, 신시장, 종업원의 교육훈련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나가게 된다.<sup>2)</sup> 그런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적인 투자에 나선 기업가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이렇게 보면 영세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sup>3)</sup>

## 1. 경제의 성장 과정

시간이 경과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순환의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풍부해지며 질이 향상되는 현상이 경제성장이다. 공급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이해하자면, 국민경제의 생산주체인 기업부문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현상을 수요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공공지출 그리고 해외부문에 대한 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확대 균형의 과정을 반복해나가는 것이 경제

2)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들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체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아래서 논의하는 사적 소유, 자유 그리고 경쟁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3)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고전적인 연구로서 Schumpeter (1950: 2008)를 들 수 있다.

성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에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크기를 노동자1인당생산량이라고 정의하면, 총생산함수에 관한 적절한 가정 하에서 그 크기는 노동력 한 단위와 결합되어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운용의 효율성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 한 단위당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많고, 기술이 앞서 있으며, 경제운용의 효율성이 높은 나라는 부유하다. 그 반대로 노동력 한 단위당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아주 적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운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나라는 가난하다. 이를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요소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며, 기술수준을 착실하게 높여 나가고,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는 나라의 경제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성장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 식에서  $y_{jt}$ 는 노동자1인당생산량,  $A_{jt}$ 는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 그리고  $m_{jt}$ 는 근로자 한 사람이 갖고 일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나타낸다.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  $A_{jt}$ 는 다시  $T_{jt} \cdot E_{jt}$ 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T_{jt}$ 는 기업가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나타내고  $E_{jt}$ 는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아래 첨자  $j$ 는 국가 그리고  $t$ 는 시기(연도)를 나타낸다.

$$y_{jt} = A_{jt} \cdot \phi(m_{jt}) \equiv T_{jt} \cdot E_{jt} \cdot \phi(m_{jt}) \quad (1)$$

위 식에서  $\phi(m_{jt})$ 는 노동자 한 사람당 갖고 일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  $m_{jt}$ 가 일정한 함수의 형태를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됨을 나타낸다.<sup>4)</sup>

식 (1)에서 보듯이 노동자 한 사람당 갖고 일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  $m_{jt}$ 가 많아서  $\phi(m_{jt})$ 가 큰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앞서 있어서  $T_{jt}$ 가 큰 값을 지니는 나라 그리고 경제운용이 효율적이어서  $E_{jt}$ 가 큰 값을 갖는 나라가 노동자1인당생산량  $y_{jt}$ 가 큰 나라 즉, 부유한 나라가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열악한 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양호한 나라는

4) 이 식은 Weil(2013)이나 Jones and Volrath(2013)가 경제성장론 교과서에서 활용한 ‘학습장치’를 인용한 것이다.

빈곤 상태를 벗어나며,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양호한 나라는 중진국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한 사람당 갖고 일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  $m_{jt}$ 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데 성공하는 나라는  $y_{jt}$ 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즉, 요소 투입량을 늘려나가는 투자를 통해서 1인당소득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다. 이에 더해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T_{jt}$ 를 높여나가는 데 성공하는 나라는 요소투입량만 늘려나가는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서 경제운용의 효율성  $E_{jt}$ 까지 개선하는 데 성공하는 나라는 요소투입량을 늘려나가고 기술수준을 높여 나가는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노동자1인당생산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리는 일이 기술수준을 높여 나가는 일보다 쉽고, 기술수준을 높여 나가는 일이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보다 쉽다. 아주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을 비롯한 각종 생산요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성공하면 최빈국의 대열에서 탈출해서 저소득국가군에 진입할 수 있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일에 더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성공하는 나라는 저소득국가군에서 이탈해서 중소득국가군으로 진입할 수 있다. 중소득국가군에 속한 나라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두 가지에 더해서 경제운용의 효율성마저 개선해 나가는 데 성공하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고소득국가로 성장하게 된다.<sup>5)</sup>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려나가고,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며,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한 투자와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넓은 의미의 투자가 관건이다. 투자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국내저축, 해외차입,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통해서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sup>6)</sup>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건 투자에 성공하면

5) 베트남은 생산요소를 축적해나가는 단계,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 그리고 남한은 이 두 가지에 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고도성장기의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남한은 해외차입을 활용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경제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며 그 결과 내국인의 고용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승수효과가 클수록 성공적인 투자가 가져오는 고용증대 효과와 소득증가 효과가 커진다.

국내저축이나 해외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투자로 이전되는 과정에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면 적재적소에 자금이 배분되어져서 경제가 활력을 갖게 되지만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게 되어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금융은 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금융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편 실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 이상으로 금융이 과열되면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터지는 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sup>7)</sup>

## 2. 투자와 성장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관한 이제까지의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투자다. 우리는 누구나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에서 소비라 함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투자라 함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비보다 투자에 치중하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나라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건설하게 성장한다. 투자를 소홀히 한 채 소비에 치중하는 나라는 성장하기 어렵다. 특히 값싼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빚을 내서 소비하는 나라는 반드시 위기를 겪는다. 빚을 내더라도 그것을 투자하는 데 써서 성공하면 성장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장 속도가 비교적 빠른 국가들을 보면, 좁은 의미의 투자인 고정자본형성, 건강과 교육 및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사회자본 투자 등을 합한 광의의 투자를 위해 국민소득의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투자율이 40% 정도로 매우 높다. 반면에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은 20% 미만의 투자율을 보인다.<sup>8)</sup>

7) 금융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Levine (2005) 을 보라.

8) 신고전학과 성장모형에서 '수정된 황금률'에 해당하는 최적 투자율을 구하면 (자본의 몫)  $x$ (시

투자율이 낮은 나라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투자여건이 나쁘거나 투자재원이 부족해서 투자율이 낮은 빈국들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부국들이다. 투자율이 높은 나라들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많고 안심하고 투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좋은 투자기회가 많이 생겨난다. 그런 나라들은 투자와 성장의 상승 작용을 거치면서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동해간다. 그런데 자본축적에는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경제가 성장해서 부국이 됨에 따라서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그래서 빈국이 성장해서 중진국이 되었다가 선진국으로 이행할 무렵이 되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율도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경제도 고속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서 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간다.

선진국 또는 고소득국가이면서도 창조적 파괴를 통해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나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나라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가 많은데다 투자재원이 풍부하며 투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선진국치고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sup>9)</sup> 반면에 선진국 또는 고소득국가라 하더라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지 못하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다가는 경제퇴보를 경험할 수도 있다.<sup>10)</sup>

국제 사회에 대해 개방되어 있으며 투자 환경이 좋은데도 빈국의 처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 다수가 빈곤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더라도 투자 환경이 양호하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들은 해외 투자가의 힘을 빌어서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단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국내에서도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방점은 이 나라의 투자 환경이 양호하다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양호한 투

---

간선호환인자)가 되는데, 고정자본의 몫이 33% 정도이고 시간선호환인자가 0.98 정도 되므로 고정자본에 대한 최적투자율이 30%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인적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하면 광의의 자본에 대한 최적투자율은 적어도 40%는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9) 미국과 독일을 그런 예로 들 수 있다.

10)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을 그러한 예로 들기도 한다.

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금상첨화이다.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국제사회에 대해 폐쇄적인 데다 투자 환경이 열악한 빈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투자 환경이 열악하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므로 그렇다. 투자 환경이 열악하면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터인데 폐쇄적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나라가 가난해서 투자 여력을 지닌 국내 자본가가 희소한 형편에 투자 환경조차 열악하다면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내국인에 의한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투자 부족으로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어 경제성장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된다.<sup>12)</sup>

### 3. 투자 환경 개선의 요체: 재산권 보호

그렇다면 빈국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걸음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투자의 과실을 빼앗아간다면 누가 투자하고자 들겠는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요체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내가 번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투자의 과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하므로 투자의 과실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

누가 투자의 과실을 빼앗아 가는가?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소수의 정치가와 토호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강도와 도둑이 횡행하는 데서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끊이지 않는 내란이나 잦은 외적의 침략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내일까지 살아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이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는가?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삼는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11) 개혁과 개방 이후의 중국 경제가 한 예가 된다.

12) 북한 경제의 장기 침체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것 즉, 사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가 노력해서 거둔 과실을 한 군데 모아 놓고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쓴다는 것은 매우 그럴 듯해 보이는 몽상이다.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나와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도 열심히 일할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남이 행한 투자의 열매를 가만히 있어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구태여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유 경제는 제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하든 조만간에 와해되게 마련이다. 역사상 공유경제로서 성공한 예는 아주 강한 믿음으로 뭉친 작은 규모의 공동체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라는 허상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전면적인 공동 소유보다는 덜 하지만, 골고루 나누어 갖자는 이상이 지배하는 사회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의 사회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경제의 사회화란 개인이 노력해서 거둔 과실 중에서 사회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몫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누어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과 나누는 데서 보람을 느끼므로 열성을 다해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어 갖고자 노력한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의 사람들도 자기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감을 알기에 자기 몫의 일정한 부분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놓는 게 타당한 일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커다란 저항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이다.

그렇지만 공동체로 귀속되는 몫이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고 그래도 빼앗기면 아예 열심히 일할 생각을 접게 된다. 그래서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사회화가 더 진전되면 빼앗기는 게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아예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능력이 모자라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내놓아야 할 몫이 더 커진다.

경제의 사회화가 낳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자립 자조 정신이 사라진다는 데 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던 강인한 개인주의가,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주의로 변질되면 발전을 도모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

이 부끄럽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공동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는 반드시 쇠퇴한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팽배한 곳에서 영속적인 발전의 싹을 찾기란 어렵다.

#### 4. 어떤 나라가 성장하는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경제성장에 성공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국민들 모두가 열심히 일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생업에 몰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열과 성을 다해서 창출한 소득을 현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소비하고 투자하되 그것이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지식과 기술 등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가 기업이므로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 혁신과 기술발전을 주 무기로 삼아 국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나라가 부강해지며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 기업과 기업가를 백안시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넷째, 세계시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잘 산다. 개방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하지 않고 잘 살게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이며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때 자국의 인재와 자금과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못지않게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재와 기업이 자국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힘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나라가 잘 살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참다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진다. 변화와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게 마련이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슬기롭게 제어할 수 있어야 경

제가 성장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방과 치안과 공교육과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데 힘쓰도록 유도하고, 통상 정책을 현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개방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되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고, 치열한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일곱째, 금융이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금융은 경제순환의 피와 같아서 금융이 결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금융은 또한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함에 있어서 경제논리를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왜곡된 자금흐름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여덟째,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II.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사적 소유, 자유 그리고 경쟁이다

위에서 열거한 성장의 요건은 경제 원리에 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현재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다. 일단 성장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도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간다면 빈곤을 탈피하는 것을 넘어서 비교적 잘 사는 중위 소득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바탕위에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성공하면 고소득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일견 쉬워 보이는 일인데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많을까?<sup>13)</sup>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된 것일까?

13) 세계은행(2015) 자료를 보면 2012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약 71억 명 중에서 약 9억 명이 2011년 구매력으로 계산한 소득이 하루 1.90달러 이하인 절대빈곤자임을 알 수 있다.

## 1. 사적 소유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경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성을 다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렇게 해서 창출한 소득의 보다 많은 몫을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쓰는 나라는 성장하고,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해 생업에 종사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창출한 소득의 거의 전부를 당장의 만족을 충족시키기는 데 써 버리는 나라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도록 이끄는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것을 가지려는 욕망 즉, 소유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다. 내가 일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경험을 축적해서, 내가 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기업을 경영해서 벌어들인 나의 정당한 몫을 내가 소유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열성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내가 열과 성을 다해 경제 활동에 임하면 내 후손이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4)</sup>

물론 사람들은 그가 이룩한 바가 본인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라는 틀이 있어서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알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공동체를 위해 내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며 세금 모금에 응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이웃을 돕는다. 이때 공동체를 위한 몫의 크기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은지가 이슈가 된다. 각자가 알아서 정하도록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다 조달하지 못하게 되므로 조세 제도를 활용해서 강제로 징수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 세금을 걷으면서 동시에 모금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써서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몫을 크게 하고자 노력한다.

공동체의 몫으로 내놓아야 하는 몫이 너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적게 내거나 또는 아예 안 내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정신이 손상되고 자

14) 이 명제는 입증 가능한 것인가? 내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노예들을 부려 먹으려면 채찍을 들어야 하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원을 낭비하게 된다. 내놓을 몫이 더 커져서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가 되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이 약화되며 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를 이탈하기도 한다. 사실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아 하는 몫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몫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 역시 강해짐을 의미한다.

## 2.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소유가 보장되어서 열심히 살아갈 강한 동기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정한 질서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뜻한다. 또한 그것은 자기가 하려는 일에 수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뜻한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사적 소유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공동체가 정한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한,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 누구나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재산을 소유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진정한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자기 것이 없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으면 자기 것을 가져와야 소용이 없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적 소유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사적 소유가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 역시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뜻한다.

자유로운 행동에는 비용과 책임이 따른다. 또한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체가 정한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설계해서 모든 구성원이 지키도록 강요한다. 헌법을 비롯한 성문법과 관행으로 정립된 규범 그리고 규제나 명령 등 행정조치들이 그런 예가 된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듯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체마다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다. 아주 자유로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나라도 있다. 극도로 자유를 제한하다가 허용한

나라도 있다. 그 중에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자유의 폭을 넓혀온 나라도 있다. 경제성장과 연관해서 보면 자유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경제가 활성화됨을 볼 수 있다. 반면 방임에 가까운 자유는 무질서를 초래해서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sup>15)</sup>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전자는 소위 포지티브시스템이고 후자는 네거티브시스템이다.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네거티브시스템이 더 좋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나 남들이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포지티브시스템 하에서는 미지의 영역을 자유롭게 개척하기가 어렵다.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허용항목으로 넣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거티브시스템이라면 그런 문제가 적을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을 금지항목으로 규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sup>16)</sup>

경제활동의 자유와 또 다른 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즉,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이 기회의 균등인가? 위에서 본 바 대로 공동체가 정한 질서를 지키는 한,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한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 누구나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기회의 균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15) 예를 들어서 북한은 극도로 자유가 제한된 나라, 중국은 점진적으로 자유를 허용해오고 있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는 일시에 자유를 허용한 나라로 이해된다.

16) 아주 포괄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는 갈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네거티브시스템도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 3. 경쟁

발전의 세 번째 원동력은 경쟁이다. 여기에서 경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경쟁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태시킬 수도 있는 위협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위협이 존재해야 끊임 없이 개혁하고 혁신한다. 반면에 그런 위협이 없으면 점점 더 나태해진다. 이런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무엇이 경쟁의 위협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온갖 종류의 진입장벽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진입장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현재의 승자는 더욱 더, 나보다 잘하는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을 싫어하며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갖가지 명목을 달아서 진입장벽을 설치하려고 든다. 자기 영역에 나보다 잘하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진입장벽을 쳐서 독과점을 허용하고,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자의 출현을 방해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분할한다.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수입규제 역시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이다.

진입장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이다. 그들은 현재의 체제 아래서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해서 갖가지 장치를 활용해서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을 방해한다. 사회의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기득권을 허물기가 어렵다. 특히 금력과 권력과 폭력을 지닌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깨뜨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금력과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함은 물론 공동체가 정한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진입장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 소위 지대추구행위다. 지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을 때 공급자가 누리는 이익일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경제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행위이다. 지대추구 행위를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경제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사이드 그룹에 끼지 못하면 경쟁에 참

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유, 자유, 경쟁이라는 세 가지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경제를 조직하고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 행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무임승차의 문제, 외부성의 문제, 조정실패의 문제, 정보비대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 자유,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쟁에 동참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경쟁에 나섰다가 낙오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사유, 자유, 경쟁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떠한 명목으로 건 사유, 자유, 경쟁의 원칙을 제한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데 있다.

사실 인류가 사유, 자유, 경쟁의 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극히 최근의 일이다.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인류가 지금의 화폐가치로 계산해서 천 달러가 안 되는 소득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세 이전의 시기에는 통치권, 신권, 군권을 지닌 극소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신임을 받은 일부를 제외한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노예나 마찬가지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인류가 보편적인 사유와 자유의 권리를 갖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의 발발도 사유, 자유, 경쟁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기에 가능했으며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평균적으로 열 배 이상 부유해진 것도 사유, 자유, 경쟁의 힘 덕분이다.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노예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는 많은 수의 평민이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빈곤’ 상태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

사유, 자유, 경쟁 가운데서 사유가 근본이다. 사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사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경쟁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사유를 허용하는 것이 발전의 첫걸음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매우 단순한 경제모형을 이용해서 사적 소유가 지니는 경제



적인 힘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이려고 한다.

### Ⅲ. 사적 소유의 힘: 영속 세대 모형을 이용한 이해<sup>17)</sup>

#### 1. 모형설정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한데 단지 사유 또는 공유로 소유의 형태만 상이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달리 행동하며 그 결과로 얼마나 상이한 경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  $N_t$  명의 현재 세대원이 각자가 한 단위씩 지닌 노동력과 자산(asset)  $X_t$ 를 결합해서 재화  $Y_t$ 를 생산하는 경제를 상정한다. 이 경제의 총생산 함수는 아래와 같이 Cobb-Douglas 함수로 주어진다.

$$Y_t = AX_t^\alpha N_t^{1-\alpha} \quad (2)$$

여기에서  $A$ 는 이 공동체가 지닌 기술 수준을 나타내며 파라미터  $\alpha$ 는 자산  $X$ 의 생산성을 나타낸다.  $\alpha$ 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지닌다.<sup>18)</sup> 식 (2)에서 기술 수준을 기간과 무관하게 상수로 표현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편의상  $A$ 를 주어진 것 즉, 외생변수로 본다는 점이다. 인구는 사람들이 몇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가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변수이다. 세대 중첩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세대만 살다가 죽는 상황을 고려하기로 하자. 따라서  $N_t$ 는  $t$ 기의 인구 즉,  $t$ 기의 세대원 수를 나타낸다. 이들이 각각  $n_t$ 명의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면 다음 기의 인구는  $N_{t+1} = n_t N_t$ 가 된다. 자녀 수  $n_t$ 는 0보다 큰 값으로 정해지는데 1보다 크면 인구가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인구가 감소하며, 1이면 인구가 변화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산한 재화  $Y_t$ 를 자신들을 위한 소비  $N_t c_t$ 와 자녀 양육비  $kn_t N_t$ 에

17) 이 절은 Lucas(2002)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해서 소유 형태의 차이가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18) 파라미터  $\alpha$ 가 큰 값을 가질수록 자산  $X$ 가 재화  $Y$ 를 생산하는 데 공헌하는 정도가 커진다.

나누어 쓴다. 여기에서  $c_t$  는 세대원당 소비의 크기를 그리고  $k$  는 한 명의 자녀를 낳아서 성인으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k$  의 크기를 주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N_t c_t + k n_t N_t = Y_t = A X_t^\alpha N_t^{1-\alpha} \tag{3}$$

위 식의 양변을 세대원 수  $N_t$  로 나누면 세대원당 예산제약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c_t + k n_t = y_t = A x_t^\alpha \tag{4}$$

이 식에서  $x_t$  는 세대원 한 사람당 자산의 크기 즉,  $X_t/N_t$  를 나타내며  $y_t$  는 세대원 한 사람당 생산량(소득)의 크기를 나타낸다.

식 (4) 의  $y_t$  를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총생산량  $Y_t$  를 세대원 수로 나눈 1인당생산량 또는 평균생산량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산  $X_t$  를 사용할 권리를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 해주었을 때 각자가 생산하는 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셋은 공동체가 갖고 있던 자산을 아예 구성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을 때 각자가 생산하는 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19)</sup> 이 세 가지가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은 현 세대에 국한해서 보면 자산의 소유 형태가 1인당생산량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사유나 공유나에 따라서 1인당생산량의 변화 양상 즉,  $y_t$  의 변화 양상이 달라지며 그 결과 사유나 공유나에 따라서 각 경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정상상태의 1인당생산량도 달리 정해진다.

세대원 1인당생산량  $y_t$  가 어떠한 양상을 띠며 변화할 것인가는 각 세대원이 소비와 투자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 현 세대원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c_t$  는 논란의 여지없이 소비에 해당한다. 자녀를

19) 우리가 가정한 대로 생산함수가 선형동차(linearly homogeneous)이면 세 가지 경우 모두 1인당생산량은 동일한 크기로 정해진다.

낳아 기르느라 사용하는  $kn_t$ 는 소비임과 동시에 투자가 된다. 미래 세대를 살아갈 주인공을 낳아 기르는 일이므로 투자가 되고, 자녀를 갖는 일 자체에서 부모가 행복을 느끼게 되므로 소비가 된다.

일생 동안 활용하는 자산  $x_t$ 에 대해 내가 주는 변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투자가 된다. 여기에서 자산에 대해 변화를 준다는 것은 나의 직계 후손 한 사람이 갖고 일하게 될 자산  $x_{t+1}$ 의 크기를 내가 사용하던 자산  $x_t$ 보다 크거나 작게 또는 같게 만듦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x_t$ 가 내 것이라면 즉, 내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세세대대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x_{t+1}$ 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x_t$ 의 사용권한을 한시적으로 갖는 경우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x_t$ 가 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경제행위가 내 후손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이다. 미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 즉, 투자에 관해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생각해 보아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마지막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의 소유 여부가 사람들의 경제행위 특히 투자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경제모형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u_t = (c_t)^{1-\beta} (n_t)^\eta (u_{t+1})^\beta \quad (5)$$

위 식에서  $u_t$ 는  $t$ 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일생 동안 누리는 효용을 나타낸다. 그의 생애효용은 그가 일생 동안 소비하는 재화의 양  $c_t$ , 그가 낳아 기르는 자녀의 수  $n_t$ , 그리고 그 자녀 하나하나가 그 자신의 일생 동안 누리게 될 효용 즉, 자녀의 생애효용  $u_{t+1}$ 의 함수가 된다. 파라미터  $\beta$ 는 자녀의 생애효용이 나의 생애효용에 대해 주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beta$ 가 큰 값을 가질수록 나는 내 자녀가 누릴 복지를 중시하는 것이 된다. 이 파라미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1 - \beta$ 는 나 자신의 소비가 나의 생애효용에 대해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 파라미터  $\eta$ 는 내가 낳아 기를 자녀의 숫자가 나의 생애효용에 대해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 아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행복이 커진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서 파라미터  $\eta$ 가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한다.<sup>20)</sup>

## 2. 모형의 해 도출

효용함수가 식 (5)로 주어지고 예산제약식이 식 (4)로 주어질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단계에서 우리(경제학도)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식 (4)를 통해 주어지는 대안들 중에서 식 (5)로 주어지는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옵션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분석한다. 더 나은 대안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도 그러한 전제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식 (4)는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공하는가? 식 (4)의 마지막 항은 우리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은 경제에서 정해지는 1인당생산량을 나타낸다. 식에서 보듯이  $t$  세대원의 1인당생산량은  $y_t = Ax_t^\alpha$ 로 정해진다. 여기에서  $A$ 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며  $x_t$ 는 각각의 구성원이 갖고 일하는 자산의 양을 나타낸다. 이제부터는 경제 전체의 자산의 양이, 생산과정에 투입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며 투자를 통해서 그 가치를 늘릴 수도 없어서, 상수 값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즉, 모든  $t$ 에 대해서  $X_t = X$ 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자산  $X$ 에 노동력  $N_t$ 를 투입해서 생산한 재화의 양이 식 (2)의  $Y_t$ 로 결정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때 한 사람이 갖는 몫이 식 (4)의  $y_t$ 가 된다는 사실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X$ 의 소유권을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갖고 각자가 일해서 거둔 수확량도  $y_t$ 가 됨 역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결국  $t$ 세대원 한 사람이 생산하는 재화의 양은 소유권의 존재 여부 즉, 사유냐 공유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정해진다.

이처럼 개인이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이 전체가 공동으로 생산한 양과 같아지

20) 나의 소비  $c_t$ 와 자녀의 효용  $u_{t+1}$ 이 나의 효용함수에서 선형동차가 됨에 유의하자. 모형의 해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려면  $\eta > \beta$ 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생산함수를 선형동차로 상정한 모형의 특징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가정에 있다. 생산함수가 선형동차라 하더라도 공유일 때는 사유일 때와 견주어서 열심히 일할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늘린 생산량의  $1/N$ 만 내 몫이 되며 남이 열심히 일해서 늘린 생산량의  $1/N$ 이 내 몫으로 돌아오므로 열심히 일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똑같은 정도로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가정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감시원을 두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줄어든다.

우리가 고려하는 문제에서 재산의 소유여부가 현 세대 구성원 한 사람당 생산량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 사람이 갖고 일하는 자원의 크기가 두 경우 모두  $x_i$ 로 동일하며 노동 강도 역시 동일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모형의 기술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후자는 인성에 관한 가정에서 연유하는 주관적인 가설이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실인 것으로 상정한 다.

자원  $x$ 를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생애 효용을  $v(x)$ 라는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경제학도들이 평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 아래 식을 만족시키는  $v(x)$ 가 유일하게 존재하며  $v(x)$ 는  $x$ 에 관하여 증가(increasing) 함수이고 볼록(concave)하며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continuously differentiable)하다.<sup>21)</sup>

$$v(x) = \text{Max} [c^{1-\beta} n^\eta v(x')^\beta]$$

subject to (6)

$$c + kn \leq Ax^\alpha$$

위 식에서  $x'$ 은 자녀 한 사람이 갖고 일할 자원의 양을 나타내며 따라서  $v(x')$ 은  $x'$ 을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내 자녀의 생애효용을 나타낸다. 식 (6)은 나의 생애효용이 자녀의 생애효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서 나의 소비와 내가 낳아 기를 자

21) 증명은 Lucas and Stokey (1989)를 참조하라.

녀의 수를 가장 잘 선택할 때 내가 누리게 되는 행복의 크기로 정해짐을 보여준다.

식 (6)으로 주어진 경제문제의 해는 내 자녀가 갖고 일하게 될 자원의 양  $x'$ 의 크기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정해진다.  $x$ 가 내 것일 때는 내가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 명의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내 재산을 균등하게 남겨준다면  $x' = x/n$ 으로 정해진다. 즉, 내 자녀가 갖고 일하는 자원  $x'$ 의 크기가 내가 낳아 기를 자녀의 수  $n$ 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x$ 가 사유물인 경우에는 식 (5)에서  $v(x') = v(x/n)$ 이 되어 자녀 수  $n$ 에 관하 나의 선택이 내 후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나는 그런 사실을 감안해서  $c$ 와  $n$ 을 정한다.

반면에  $X$ 가 공유물이라면, 비록 내가  $x = X/N$ 만큼의 자원을 활용해서 재화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갖고 일하게 될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즉,  $x'$ 의 크기에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것은 나를 비롯한 나의 동시대인들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아서 기를 것인가 하는 점(이것이  $N'$ 을 결정한다)과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도 내 자녀가  $X/N'$ 만큼의 자원을 갖고 일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두 가지 모두 나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x'$ 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 경우 식 (6)에서  $v(x')$ 은 나의 선택 밖에 있으므로 그것은 무시하고 선택에 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경제학도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n$ 명의 아이를 낳으면 다른 사람도  $n$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아이가  $x' = x/n$ 만큼의 자산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v(x')$ 까지 고려해서 나의 소비와 자녀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유경제라고 해서  $v(x')$ 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생각일까?)

위 문제의 해가 차분방정식(difference equation)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소유 형태가 문제시 되지 않지만 차분방정식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소유 형태가 중요하다. 소유 형태에 따라 공유와 사유로 나누어서 각각의 차분방정식을 구하고 그것의 정상상태에서의 해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sup>22)</sup>

22) 해를 구하는 방법은 공지(common knowledge)이므로 자세한 설명 과정을 생략한다.

(공유의 경우)

$$y = \frac{1 - \beta + \eta}{\eta} k \quad (7)$$

$$c = \frac{1 - \beta}{\eta} k \quad (8)$$

(사유의 경우)

$$y = \frac{1 - \beta + \eta}{\eta - \alpha\beta} k \quad (9)$$

$$c = \frac{1 - \beta + \alpha\beta}{\eta - \alpha\beta} k \quad (10)$$

### 3. 모형이 주는 함의

위의 식 (7)~(8)과 식 (9)~(10)을 비교해보면 공유 경제를 사유 경제로 바꾸면 구성원 각자가 창출하는 소득과 자신을 위해 쓰는 소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소득을 나타내는 수식을 보면 분자는 양자가 같으나 분모는 공유의 경우가 사유의 경우보다 크다. 따라서 사유 경제의 1인당소득이 공유 경제의 그것보다 (모형에서 상정한 파라미터 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큰 값을 갖는다. 소비를 나타내는 수식을 보면 공유의 경우보다 사유의 경우가 분자는 큰 값을 그리고 분모는 작은 값을 가지므로 사유 경제에서 정해지는 소비가 공유 경제에서 정해지는 소비보다 큰 값을 갖는 게 명확하다.

위에서 구한 해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의 파라미터들이  $\beta = 0.2$ ,  $\eta = 0.25$ ,  $\alpha = 1/2$ ,  $k = 300$ 라는 값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자.  $\beta$ 가 0.2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의 소비가 나에게 주는 행복이 약 네 배 더 큼을 의미한다.  $\eta$ 가 0.25라는 것은 자녀수가 예를 들어서 100% 증가하면 나의 행복감이 25% 증가함을 의미한다.  $\alpha$ 가 0.5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자산(토지)과 노동력이 공헌하는 정도가 같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k$ 가 300이라는 것은 자녀 하나를 낳아서 성인으로 키우는데 재화 300에 해당하는 비용이 듭을 의미한다.<sup>23)</sup>

위에서 상정한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면, 공유일 때의 소득과 소비는 각각 1,260과 960이 되며, 사유일 때의 소득과 소비는 각각 2,100과 1,800이 된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둔 채 소유 형태만 공유에서 사유로 바뀌도 소득은 약 1.67배 소비는 약 1.88배 늘어난다. (소득과 소비의 구체적인 값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공유에서 사유로 바뀌면 소득과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 (1)사유의 힘1: 투자유발효과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여부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동일한 두 공동체의 경제적 성과가 위에서 본 것처럼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은 재산의 소유 형태가 인간의 경제 행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막중함을 보여준다. 공유 경제에서는 1,260이던 1인당산출량이 사유 경제에서는 2,100으로 67%나 증가하는 예시가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소유 형태에 따라서 경제적 성과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본 예에서 경제적 성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재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방식 즉, 투자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유 경제에서는 내가 내 몫을 다 쓰지 않고 후손을 위해 남겨 두더라도 그것을 나의 후손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재화를 남겨 둘 인센티브 즉, 저축할 유인이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떠한가?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수록 행복해지므로 부모는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한다.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비용이 듦으로 무작정 많이 낳지는 않는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내가 낳아 기를 자녀수에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처지가 달라지느냐 하는 점이다. 자녀수가 그들의 경제적 처지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는 소유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달라진다.

$x$ 가 사유물이어서 내가 사용한 다음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 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서 자녀를 적게 낳게 된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 갖고 일하게 될 자원의 크기가  $x' = x/n$ 으로 정해지므로 내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면 즉,  $n$ 을 큰 값으로 정하면 내 아이들은 나보다 적은 양의 자산을 갖고 일생을 시작

23)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상정한 것은 공유경제에서 정해지는 소득 1,260이 인류가 산업혁명 이전이 시기에 누렸던 평균소득 약 1,000달러와 비슷한 값이 되도록 한 것이다.



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유 경제에서보다 정상상태의 인구는 적게 그리고 1인당소득은 크게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x$ 가 사유물이 아니어서 나의 후손이 갖고 일하게 될 자산  $x'$ 의 크기에 내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면 그 때문에 구태여  $n$ 을 작은 값으로 정할 유인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자녀를 ‘지나치게’ 많이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유 경제에서보다 정상상태의 인구는 많게 그리고 1인당소득은 작게 정해지게 된다.

위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내가 일해서 창출한 산출물을 나의 미래 그리고 내 후손의 미래를 더 낮게 만드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쓸 것인지 여부가, 투자의 과실을 누가 갖느냐 하는 소유권의 존재 유무에 좌우된다는 관찰은 매우 보편적인 인간 현상이다. 피땀 흘려 가꿔서 거둔 과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 과실을 모두 빼앗길 것임을 알면서도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외일 뿐이다. 인간의 소유 본능은 원초적인 것으로서 그 힘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소유 본능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첫 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도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가설:**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재산의 소유 형태를 공동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변화시키면 구성원 각자가 누리게 될 소득과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사유를 허용하면 투자의 과실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양질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사유의 투자유인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 (2) 사유의 힘2: 노력유발효과

전 항에서 고찰한 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소유 형태와는 무관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즉, 사유이건 공유이건 간에 사람들은 똑같은 정도로 열심히 살아갈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기에서 사유와 공유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소유 형태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본 바는 사유가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소유 형태가 경제 활동 결과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 학습, 훈련, 연구개발, 투자 등 제반 경제 활동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소유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유가 보장될 때 즉,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과실을 나와 내 후손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투하해서 경제 활동에 임하게 된다. 전 항의 예에서는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소비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것임을 전제로 분석했는데, 공유일 때와 견주어서 사유가 허용될 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현명하게 소비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서 자녀를 낳아 기른다면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위에서 든 예에서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자녀를 하나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300으로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1인당생산량이 공유 경제에서는 1,260 그리고 사유 경제에서는 2,100으로 정해짐을 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예에서 공유 경제를 사유 경제로 전환함에 맞춰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300에서 500으로 증가한다고 하자. 자녀양육비가 증가하면 1인당산출량은 3,500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유 경제에서 사유 경제로 바뀔 때 양육비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적게 낳되 전보다 더 잘 기르려는 선택의 결과 즉,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행동 변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양육비가 300일 때 2,100으로 정해지던 1인당산출량이 양육비가 500일 때 3,500으로 1,400만큼 증가하는 것을, 사유화가 가져오는 노력유발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이 예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늘리면 결과적으로 정상상태의 소득과 소비 모두 늘어난다는 사실이지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아래와 같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가설 2):** 공유를 사유로 바꾸면 사람들이 전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배우고 연구하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더 정성들여서 자녀를 낳아 기른다. 이처럼 사유를 허용할 때 경제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내 것을 소중한 여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사유의 노력유발효과

24)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설명은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다. 보다 완벽한 설명을 위해서는 양육비  $k$ 도 선택변수로 취급하는 모형을 분석해야 한다.

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살펴 본 예에서처럼 공유를 사유로 전환함과 동시에 300이던 양육비를 500으로 늘리면, 1인당산출량이 1,260에서 3,500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1,260에서 2,100으로의 증가는 투자유발효과(investment inducement effect) 그리고 2,100에서 3,500으로의 증가는 노력유발효과(efforts inducement effect)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공유 경제를 사유 경제로 전환하면 투자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노력유발효과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사유로 전환하면 투자유발효과와 노력유발효과가 작동해서, 구성원 각자가 향유하게 될 산출량(소득)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사적 소유의 힘이다.

#### IV. 경제성장에 대한 세대 모형의 함의

전 항에서 예로 든 세대 모형은 엄밀한 의미의 경제성장 모형이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유경제를 사유경제로 전환하면 경제의 장기 정상상태에서 구성원 각자가 누리게 될 소득과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공유 경제에서 1,260으로 정해지던 정상상태의 1인당산출량이 사유 경제에서는 2,10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성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1,260에서 2,100을 향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동해 가는지 알지 못하며 새로운 정상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 또한 일단 2,100에 도달하면 우리가 고려한 모형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상태의 1인당산출량이 1,260에서 2,100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공유경제의 정상상태에서 사유경제의 정상상태로 이행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매년 5.3%씩 그리고 20년이 걸린다면 매년 2.6%씩 1인당산출량이 증가하는 셈이 된다. 사유화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20년으로 잡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경제가 연 2.6%씩 20년 동안 지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물적 자본 축적, 인적 자본 축적, 기술 발전 등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한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배제하고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순전히 사유화의 힘이다.<sup>25)</sup>

우리가 고려한 모형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동하는 인자를 넣어 분석하는 것은 그

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령 인적자본 축적 방정식을 도입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적 소유가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 특히 자녀들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적자본이 많으면 그 자체로서 기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적자본을 축적하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자는 분명히 투자행위이다. 투자행위이니만큼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의 과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인적자본 투자도 활성화된다.

내 안에 체화된 인적자본은 내 것일까? 노예가 아닌 한 나의 인적자본은 내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적자본을 써서 창출한 가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소유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다. 투자의 과실을 빼앗길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투자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진한 것은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25)</sup>

인적자본에 대한 사적 소유권 보호가 중요한 것과 동일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기술발전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힘이라는 점은 지속적인 인적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공지(public knowledge)에 속한다.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기간에 걸쳐서 인력과 장비와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해야 한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하며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시장 상황에 부합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 형편이므로 기술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새로 발굴한 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두 가지 힘 즉, 인적자본투자와 기술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도 각자가 행한 투자의 과실을 투자자 자신이 온전하

25) 노력유발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 소득이 1,260에서 3,500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하는데 20년이 걸린다면 연 평균 5.11% 그리고 30년이 걸린다면 연 평균 3.46% 씩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된다.

26) De Soto (1989) 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전개되는 경제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우리가 영속세대모형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사적 소유가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원천적인 힘이라는 명제를 동태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일 뿐 양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 ■ 참 고 문 헌

1. Jones, Charles I., and Dietrich Volrath, *Introduction to Economic Growth*, 3ed. edition, Norton: 2013.
2. Levine, Ross, "Finance and Economic Growth: Theory and Evidence," in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1A*, Edited by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Elsevier: 2005.
3. Soto, Hernando de, *The Other Path*, Harper & Row: 1989.
4. Lucas, Robert E. Jr., *Lectures on Economic Growth*, Havard University Press: 2002.
5. Lucas, Robert E. Jr., and Nancy Stokey, *Recursive Methods in Economic Dynamics*,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6.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Harper & Row: 1950, Reissued as paper back with an Introduction by Thomas K. McCraw, HarperCollins: 2008.
7. Solow, Robert M. (selected), *Landmark Papers in Economic Growth*, Edward Elgar: 2001.
8. Weil, David. N, *Economic Growth*, 3<sup>rd</sup> ed., Pearson International: 2013.
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105.

## In Search for the Ultimate Forces that Propel Economic Growth\*

Jisoon Lee\*\*

### Abstract

In this short essay I attempt to show that private ownership, economic freedom, and competition are the ultimate power sources that propel persistent economic growth. Among the three, I argue, ownership is the most basic. In order to prove this assertion, I utilize a streamlined version of Lucas' dynastic model and study how people would behave differently under two contrasting ownership arrangements: common ownership vs. private ownership.

Numerical exercises applied to the stationary solutions of the model indicate that when we move from common 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income per person would increase by more than 76%. This substantial increase in income is caused by investment inducement effects of private ownership. When efforts inducement effects of private ownership is added, income would increase by much more than 76%.

In order for an economy to persistently grow, it is essential to maintain unceasing investment in human capital, knowledge capital, and technology capital. Investments in these kinds of capital would occur most vigorously when private ownership is firmly established. When ownership is in doubt, people would be hesitant to undertake long term investment project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secure private ownership if we want to keep the economy growing indefinitely.

**Key Words:** fundamental forces for growth, private ownership, economic freedom, competition

**JEL Classification:** A0, O1

---

*Received: Feb. 22, 2016. Revised: March 8, 2016. Accepted: March 15, 2016.*

\* This paper is a written version of the Presidential Address, originally scheduled to be delivered at the 2016 Allied Economic Associations Meeting. It is intended for ordinary readers and as such it is written in plain language. I appreciate the incisive comments of the anonymous referees.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6380, e-mail: jisoon@snu.ac.kr